

“한미 무역합의 불이행”… ‘국회승인’ 지연에 대미투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산업장관·통상본부장 긴급 방미

트럼프, 관세 25% 재인상 거론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계류 변수
상무·USTR 면담추진, 협의 국면
정부, 합의 이행 강조 ‘총력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인하했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미국에 보내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참석했고, 회의 결과에 따라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 장관은 유선으로,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6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등 정부의 캐나다 방산 협력을 지원을 위해 출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니크 미 상무장관과 관련 협의에 나선다. 여 본부장도 곧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다. 방문지와 일정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

셜에 한국 정부가 한미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등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세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

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가 문제 삼은 ‘국회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 절차,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등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과 11월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자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지만, 한국 측의 입법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당초 기대보다 더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우리의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해왔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올해 안에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원화 약세와 투자 프로젝트 선정 지연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미 투자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우려가 관세 압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 측도 대미 투자 약속을 거두지 않은 만큼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신호라기보다 협상력을 높이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마스가(MASGA) 3500억달러 조선 분야 투자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건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도 이번 관세 압박이 협상 원점 회귀보다는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카드라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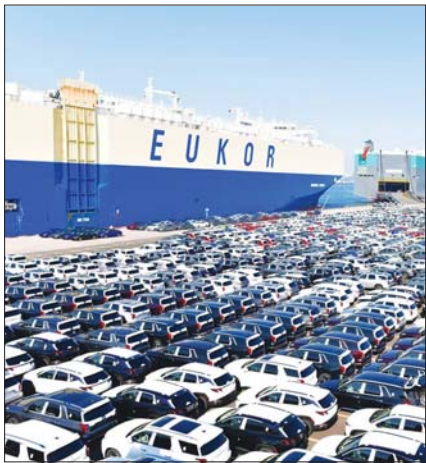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車업계, ‘비용 쇼크’ 경고등… 가격·생산·투자전략 재조정 ‘불가피’

현대차·기아, 관세 부담 연 8조 우려
한국GM도 타격, 철수설 재점화 가능
업계 “정부 협상 결과에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다. 현대차·기아가 25%의 미국 자동차 관세로 지난해 2, 3분기에만 총 4조6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을 고려하면 상호 관세에 따른 후폭풍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26일 완성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관세 인상 표명을 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

협회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북미 수출 물량은 119만6862대에 달했다. 한국GM은 44만6784대, 르노코리아는 6242대를 북미에 수출했다.

자동차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부담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2, 3분기 관세 여파로 4조6000억원(현대차 2조6000억원·기아 2조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손실을 합치면 총 관세 비용은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GM도 지난해 관세 여파로 약 2조9000억원의 관세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관세

영향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관세 25% 인상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가 25%로 인상될 경우 자동차 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더해 가격 전략과 생산·투자 계획 전반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할 가능성이 커 관세 인상의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발간한 자동차 산업점검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 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 원을 넘기

고, 영업이익률도 6.3%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도 직영정비센터 폐쇄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철수설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간 진행되는 협상이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올해 경영 계획을 15% 관세를 전제로 수립한 만큼 관세가 인상될 경우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제약업계 “당장 실현 가능성 낮아”… 현지생산 등으로 리스크 차단

셀트리온, 美 뉴저지 생산시설 확보
2년치 현지재고로 공급 공백 최소화
SK바이오파, 푸에르토리코 CMO 확보
기술수출·미국산 원료 적용 사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높이겠다고 언급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25% 관세가 현실화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임과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최대 의약품 수출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 상호관세가 크게 오르게 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 업계는 의약품에 당장 25%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아직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번 발언이 트럼프의 협상 전략일 뿐, 실제 25% 관세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이미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이 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확보해 모든 관세 리스크로부터 구조적으로 탈피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미국 생산시설에서 현지 판매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미 미국 현지에 입고된 2

년치 공급 물량을 통해 관세 영향 없이 제품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며 “어떠한 관세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바이오파 역시 추후 진행상황은 예의주시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SK바이오파 관계자는 “기존 캐나다(USMCA)에 추가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위탁생산(CMO) 생산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관세 및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왔다”며 “특히 푸에르토리코 생산을 작년년부터 시작하여 즉각적인 현지 대응 체계를 구축한 만큼 미국 현지 생산

기지 확보와 동일한 수준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를 판매 중인 유한양행은 “렉라자의 경우에도 기술수출로 완제의약품 수출이 아니어서 사실상 영향은 거의 없다”며 “우선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수출 중인 GC녹십자는 “알리글로는 미국 내 혈액법에 따라 ABO 플라스마에서 채장된 100% 미국산 혈장을 사용해 생산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수입의 상호관세 규제 행정명령에 따르면 완제품 구성물 중 미국산 원료의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비(非)미국산 원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